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

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 마련

1 제조·건설업

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

권역간 이동 불가

→ 개선 수도권 → 비수도권, 비수도권간 이동



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개선

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부터 우선 배정

→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



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진입요건 완화

관련 자격증·학위 필요

→ 개선 순수 '현장경력'만으로 진입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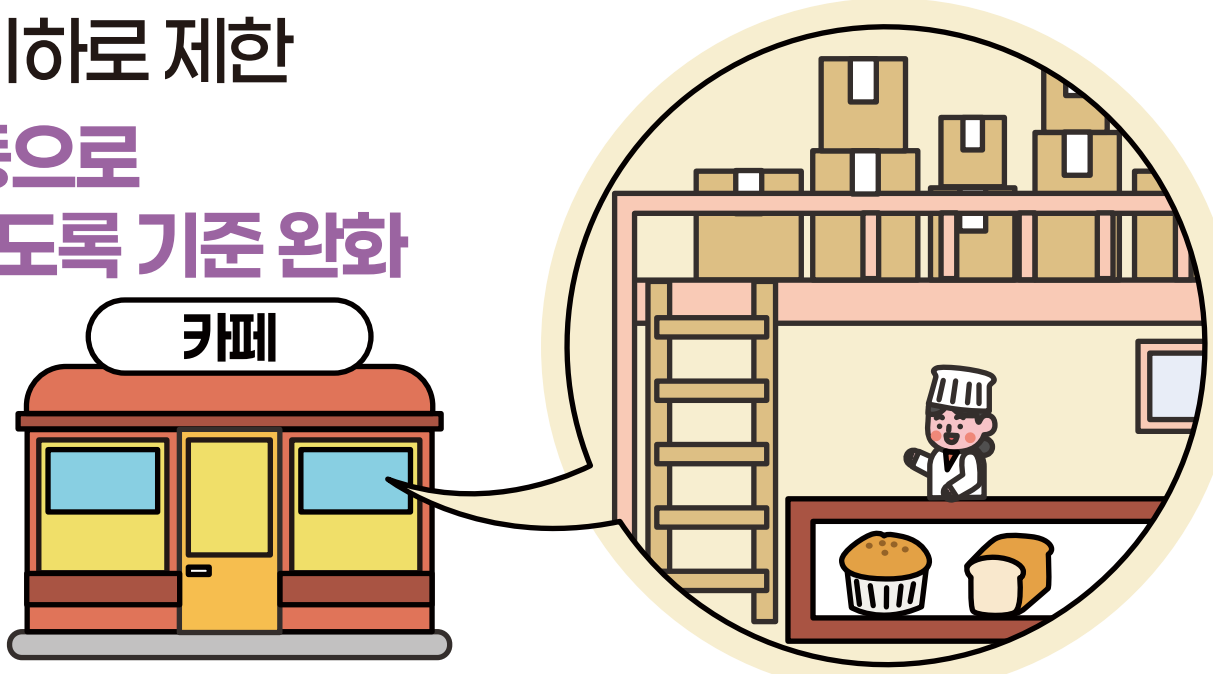


2 생활·전문서비스업

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, 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

상·하층 각각 1.7m 이하로 제한

→ 개선 창고, 주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



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확대

덤프트럭만 가능

→ 개선 레미콘트럭, 굴착기 등 9종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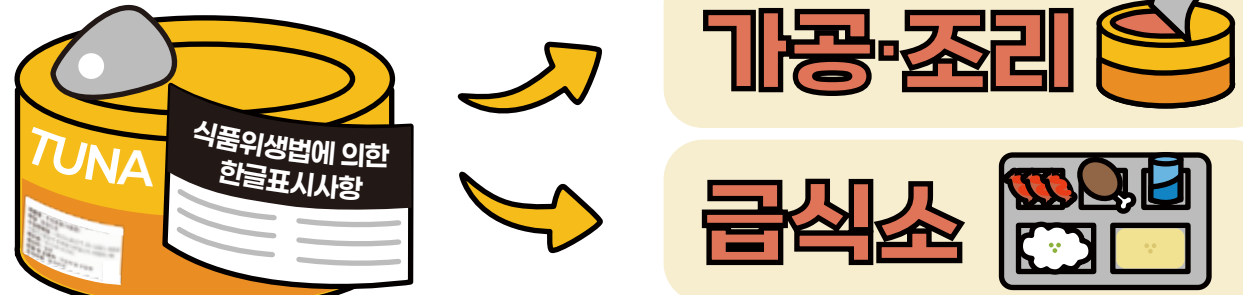


3 수출입·조달기업

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

수출 계약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한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어 국내 활용 곤란

→ 개선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으로 가공·조리용, 급식용 등 국내 활용 가능



공인인증(HACCP 등)을 보유한 사업장이 공공조달 참여 시, 중복 현장심사 면제

공인인증을 취득할 때 거쳤던 현장심사를 공공조달 참여 시에도 중복으로 실시

→ 개선 중복된 현장심사 면제



4 창업·인증기업

지자체 등과 지방 계약 시,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상향

2천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 가능

→ 개선 5천만 원 이하로 상향



창업보육센터 입주 시, 청년창업자 우대

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부족

→ 개선 입주 심사 시,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



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, '자체 선행기술조사' 의무요건 삭제

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필요

→ 개선 제출 의무요건 삭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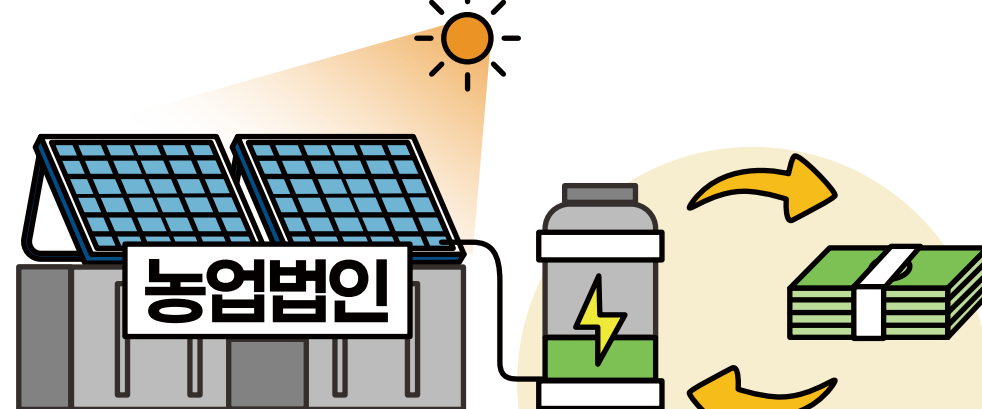


5 농·어업

농업법인의 '태양광 잉여전력' 거래 허용

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부대사업만 가능

→ 개선 농업용 공장·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 허용



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 허용

서해 특정해역은 야간조업 불가

→ 개선 안전대책 보완 후 야간조업 허용

